

사설

불교와 서울환경선언

6월5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 지구의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인류문명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on Environmental ethics)'을 선포한다. 그동안 지속되어 온 지구환경보전의 노력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과 공동보조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정부대표단이 지금 유엔 지속개발위원회 제5차 고위급 회담에 참석 중인 정부 대표들과 유엔 환경계획(UNEP) 등 각국 환경대표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수도에서 환경윤리선언을 선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뜻깊은 일로 받아들여진다.

선포되는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은 전문과 실천원칙, 그리고 실천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72년의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선언과 92년 리우선언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범지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과학 생명경시는 여전히 가속되고 있다. 서울 선언은 인류가 지구상의 여러 생명체에 대한 윤리적 책무를 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자연을 정복과 보존의 대상으로 삼아 인간의 무한한 물질적 탐욕을 충족시키려 하는 한, 지구 환경의 파괴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려 한다.

서울 선언을 계기로 불교계도 그동안 소홀했던 환경운동에 새로운 활력과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불교계는 그 철학적 인식과 실천에서 근본적으로 환경친화적이었음에도 정작 구체적인 환경운동은 주로 교육이나 기초적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뿐, 본격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는 동안에 소중한 유산인 산림과 가람이 개발과 편의의 논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파괴돼 왔다. 또한 사찰이 신도권

의를 위해 사찰 입구까지 시멘트로 길을 낸다든가 이런 저런 불사로 산림과 경관을 파헤치는 일은 가급적 삼가야 할 것이다. 절집부터 우선 개발과 편의, 쾌적성이라는 잘못된 적용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도량의 본분을 지켜나가야 한다.

불교의 환경보존노력은 이같은 자체 점검에서 시작된다. 이제 절은 수행자들의 수도도량으로서만이 아니라 속세에 지고 시멘트 밭새에 찌들은 무량 중생들의 회귀를 위한 정신의 쉼터요, 감로의 손길이 되어야 한다. 도량 자체는 無爲의 설법을 전신으로 토하고 있는 공간이다. 최근 이적조라는 일본학자는 리츠프가 궁극적으로 불교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언제나 돌아가 될 곳이라는 윤리적 본성의 반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내부적 노력이 외부적으로 확산될 때 불교 환경운동이 설득력과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불교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하에 다양한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인포장문제를 비롯 사찰호니, 대청호니, 산업쓰레기문제, 민통선의 개발문제 등등 현안은 산재해 있다. 이들에 대해 절집된 목소리를 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해야 할 때이다. 그러자면 우선 조직과 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직도 불교가 환경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궁급해 하는 사람이 많다.

'환경과 불교화'의 주제하에 환경을 재인식하는 교리내용을 찾아 경전을 재해석하는 한편, 그 성과를 널리 대중에게 알리려 한다. 그레아만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같은 대중의 계몽과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본격적인 감시활동도 벌여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기존의 전문 환경단체는 물론, 다른 종교단체들과도 동체대비의 정신 아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열린마당

인각사지 수몰위기

보각국사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했던 인각사(642년 의상대사 창건지(사적374호)가 댐 건설 계획으로 수몰위기에 처했다(본지 104호 참조). 건설교통부가 영천의성 경산 등지의 용수공급을 위해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에 추진중인 군위댐이 인각사지로부터 불과 5백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각사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문화유산의 해를 기해 더욱 비등한 가운데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편집자 주>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수량 3천1백만(길이 138m 높이 39.5m)의 군위댐 건설로 수몰될 위기에 처한 인각사지 전경. 보각국사비의 부도탑(보물 428호)이 있다.

“삼국유사 저술성지 살려야”

대원(삼국사주신)

일연스님이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고 불멸의 역사서를 집필한 성지를 수몰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중대한 역사의 일부를 수몰시키는 행위이다. 일연스님이 누구이신가. 더 늦기전에 종단에서도 나서야 한다. 주민은 물론 군청과 군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중지를 막을 수 있다.

오는 8월10일 일연스님 추모대제때 대규모 반대운동을 펼칠 계획도 갖고 있으나 절 차원으로서는 역부족이다. 선

진국에서는 대문호나 음악가 등의 작품이 탄생된 장소를 문화유적이나 관광명소로 잘 보호하고 알고있다. 겨레의 성지를 복원하기는 커녕 수몰시키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한다. 댐건설 취소를 확정발표해야 농민들도 마음놓고 농사를 짓고 인각사지 발굴도 가능해진다.

인각사지 인근의 화소대는 행락객들이 많이 몰려올 정도로 경관이 수려한 곳이다. 건교부는 군위댐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천명해야 한다.

“주민·군의회등 댐건설 반대”

홍익(홍익인간)

맑은 돈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문화유산은 금언어리도 대체할 수 없다. 군위군에서는 자체 식수조달을 위해 소규모의 상수도수원지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군위댐건설계획으로 무산돼 15억원을 환경부에 돌려줘야 했다. 군위댐이 건설되면 고로면의 1/3 이상이 댐 영향권내에 들어가고 고로면사무소가 수몰되어 고로면의 종합자체가 위협받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건교부에서 굳이 댐건설을 강행한다면 지방정부로서는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댐건설과 관련한 토지보상등은 위임사무로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인각사 수몰을 반대한다.

올들어 여러차례 주민들의 데모가 있었다. 군의회에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수몰위기에 인각사를 살리자'는 30여쪽 분량의 책자를 만들어 각계에 배포하기도 했다. 또 봉선에 토론탐방을 개설해 서명작업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작년에는 반대추진 결의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에 송부하기도 했다.

“문화재 보호차원 대책수립”

김중진(문화재관리부사무관)

개발과 보존의 대립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행태로 많은 문화유산을 잃고 말았다. 21세기의 문화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시점에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화재관리국의 입장은 우리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계승에 있다. 인각사지 수몰위기가 또 하나의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군위댐건설과 관련 2차례에 걸쳐 건교부에 공문을 보내 인각사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밝히고, 문

화재 보호차원에서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다행히 현재 군위댐건설은 아직 기본 설계 단계에 있고, 앞으로 부처간 협의가 거쳐야 함으로 얼마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민원이 빚발치고, 상대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인각사를 수몰시키면서까지 댐건설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문화재관리국은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주시해 인각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PC에선...

pc 통신 하이텔 나무누리에는 '인각사 살리기' 대화방과 서명운동이 활발히 열리고 있다. 하이텔에는 3월29일 등록돼 5월16일 현재 5백55건의 인각사 수몰반대 여론이 올라있다. 특히 타종교인들의 참여도 관심을 끈다. 나무누리도 특별게시판이 설치돼 인각사 소개에서부터 토론탐방 서명까지 다양하게 세분화돼 있다. 나무누리에는 2백96명이 인각사 수몰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 문화유산의 해인 1997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대한민국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각사는 원형대로 복원되어 후손들의 산교양장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하이텔 seullgi 김학수>

○... 다른 나라는 없는 것도 지어내서 관광상품을 만드는데 일연스님으로 유명한 인각사를 수몰해? 건설이 그리도 중요하다면 아예 전국산을 밀어버리지? 그 효으로 국토확장하면 좋겠습다. <하이텔 steinone 박중현>

○... 그동안 우리는 '잘 살아보자'는 의식주문제에 집중하여 국가를 이끌어 왔습니다. 광복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다가오는 2천년대는 돈으로 국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화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하이텔 zsmus 이경준>

“민족숨결 무시 졸속행정애 아연” “인각사지 복원 역사교육장으로”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문화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하나의 유물이 자취를 감춘다는 것은 매우 가슴아픈 일입니다. <하이텔 allure 조영길>

○... 정부에서 하는 일인지 대구시민들이 그러도 원한이? 대구토박이인 내가 부끄럽다. 대구시민들이 그걸 원한다! 이땅의 자연은 지금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모두 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후손들에게 잠시 빌린 것 뿐이다. 지킬 것은 꼭 지켜야 한다. <하이텔 du128ri 정현숙>

○... 우리의 것을 무시한 졸속행정처사는 인각사 수몰의 안타까움보다 먼저 답답함이 앞섭니다. 내년부터 개방이되는 모든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국민정신 함양의 목적을 둔 '문화유산의 해'가 유명무실한 것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나무누리 ipas 선현철>

○... 재작년 경주고속철도 반대서명운동에 이어... 경주고속철도 문제가 벌써 교과서에 실릴 만큼 국민적 저항이 심했는데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할 일 없는 사람들... <나무누리 befool 홍영주>

○... 이런식으로 하나 둘씩 소멸된 문화재들이 적지 않은데 계속 이런식으로 가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이번엔 인각사가 없어진다면 앞으로도 문화재보존은 어려워 질 것이니까요. <나무누리 allure 조영길>

현대만평

현대만평



양심을 찾으시오!

737-8881

성명서

중정예하의 범어가 없는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났습니다.

범어가 없는 부처님 오신 날은 현 집행부의 불감증에 걸린 부정과 파행을 질타하는 중정예하와 청정교단을 바라는 대중의 말없는 사자후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러한 질타를 모면하기 위하여 불교신문에 중정예하의 대답을 왜곡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중정예하와 나는 사적대화를 마치고 대담기사처럼 신는 것은 중정예하를 기만하고 나아가 우리 중도들을 현혹하고 농락한 것입니다. 교계의 바른 소식을 알려야 하는 불교신문의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파행과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급급하고 있습니다.

송월주집행부는 출범후 중정예하를 위반해가며 파행과 부정의 중무운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발전을 염원하는 중앙총회의원들은 전중도의 뜻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4월 16일 종단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개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자숙과 참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4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독선과 부정을 은폐하는 근거없는 주장과 자의적인 내용을 중도들에게 유포시키는 해종행위를 벌였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는 성명서에서 스스로 중무행정의 파행운영과 부정의 은폐기도를 드러내어 전 중도를 기만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종단의 발전을 가로막는 독선과 부정을 공개합니다.

총무원의 모든 예산은 종헌 제 36조 4항에 의거하여 중앙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직영사찰의 관리주체는 총무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중앙총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중무회의의 결의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영사찰의 예산을 유용, 횡령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불법적인 중무회의의 결의조차 받지 않고 지출한 내역이 있어 횡령의 혐의가 있으며, 그 예산의 대부분이 총무원장과 관련된 단체나 행사에 집중 지원되어 있어 음성자금의 변태적 지출이요, 선심성 종원유지자금 지출이라는 중회의원들의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은 종헌, 종법상 근거가 없는 기구이며 조직의 실체도 없는 송월주 총무원장의 사조직이며 개인사업입니다. 총무원장은 이러한 개인사업을 빌미로 기금을 불법조성하고 있으며, 선심성 예산지원등 개인의 사조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부공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축소조직을 중시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익명의 불자라는 명목으로 한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고정적으로 일천만원씩 입금되는 기금의 출처를 밝히라는 중회의원들의 요구를 무주상보시를 앞세우며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은 부정의 은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계의 중론입니다.

나이가 집행부의 독선과 부정은 오만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집행부의 총무부장이 일반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회가 유회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중회목적이요, 월권행위입니다. 만약 국가의 행정장관이 이번 임시국회는 안전도 상정이 않되고 유회될 것이라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면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송월주 집행부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중무운명을 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총무원장은 종헌을 위배해가면서 불교방송 이사에 취임했습니다. 불교방송의 대규모 부정횡령에 총무원 관련설이 나도는에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축소조직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애중적 결단으로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중앙총회의원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고 현 송월주 집행부가 불교발전과 종단발전에서 저해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개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고 은폐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집행부는 독선과 부정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무원장의 파행과 부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권고를 거부한다면 전 중도와 더불어 총무원장의 퇴진운동을 벌여 종단을 바로세우고 불교를 바로세우는 불사에 중앙총회의원들이 앞장설 것입니다. 중회의원들의 애중심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부처님과 역대조사를 욕되게 하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라며 정중히 송월주총무원장의 사퇴를 권고합니다.

불기 2541년 5월 29일

조계종단의 발전을 염원하는 중앙총회의원들의 모임

전화 : 중앙총회 사무처 735-5860 · 749-4878
팩스 : 749-4879